

광주·전남교육청, 시·도 행정통합 유보적

시 교육청, 교사·직원 원거리 발령 문제 현실화 걱정 도 교육청, 농어촌 교육 소홀 등 교육편차 우려 목소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석 이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양 시·도 교육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가 행정통합을 이룬다면 시·도 교육청도 '중속변수'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해석이지만 통합에 앞서 교육 주체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 지역 교육감은 현재까지 찬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에 대비해 기관별로의 견수력과 자료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시 교육청과 교육감은 찬반 입장 없이 유보적인 상태"라며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의 행정통합 제의는 진기가 모호한 돌출성 성격이 있고, 사전에 광역기관장들과 협의도 없어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교육감의 입장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 교직원들의 반응도 대체

로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원거리 발령'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도가 통합되면 시·도교육청도 하나가 돼 교사와 일반직 직원들의 발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광주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전남 시·군으로 발령 날 수 있어 실제 논의가 이뤄지면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교육청 직원은 "주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통합에 모두 반대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경우 통합 논의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농어촌교육의 소홀 등에 따른 교육 편차를 우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행정기구(본청)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규모와 경제 차원에서 장점으로 꼽혔지만, 학생수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진행될 경우 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농어촌 교육이 피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1986년 11월 보통사인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교육위원회가 광주와 전남교육위원회로 각각 분리되면서 현재의 시·도교육청 체제가 3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2개에 직원 2만 1000여명 예산 2조2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22개로 구성됐으며 직원 3만1000여명 예산 4조1000억원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우피해 주민·시외버스 종사자 전남도,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전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350억원을 추석 전 생활안정을 위해 전액 지급하고, 시·군과 광주 등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40만원씩 총 3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는 주택피해 2401동, 농경지 7957ha, 축사 505동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사망 실종은 2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침수는 가구당 200만원, 대파대 및 농약대, 수산생물입식비 등이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지원 단가 현실화 검토를 지시, 이제만 위로금과 주택복구비 현실화를 비롯 농림수산물 야 농약대 및 대파대, 수산생물 입식비, 시설복구비의 실거레가를 반영해 주도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를 수용해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복구비는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주택침수 구호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 7월 28일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사망자는 1000만원,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주택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시·군과 광주 등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주수지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에 주수지를 둔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 종사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운수업체지원금 포함), 택시업계 종사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버스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지급 2.6% 인상, 격려금 50만원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25일 내년도 지급 2.6%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1인당 격려금 50만원 지급도 지급 인상안과 함께 협상안에 담았다. 격려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합의한 월 8만원 인상을 분외로 추가로 반영했다.

5월 시작한 교섭은 노동조합 측 신청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내버스운수사업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 감소, 감차 운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며 "보다 나은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충장상권혁신대학 수료식
광주 동구가 지역 상권을 위해 5회에 걸쳐 운영한 충장상권혁신대학 '충장리:디자인'이 지난 25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혁신대학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향후 충장로 4~5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충장로의 변명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가 될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 통합준비단 출범

준비단은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열어 통합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세계적인 추세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사회,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전남도, 정지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혁신추진위 '인공지능 중심도시' 33개 과제 권고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시정 혁신안을 광주시에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18년 11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혁신추진위가 출범한 이후 22번째 권고·제안이다. 혁신추진위는 '인공지능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33개 과제를 권고했다.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시행, 기술혁신 플랫폼과 인력 양성 등 기반 강화, AI 기반 융합산업 육성, 스마트 공장·규제 자유구역·창업·벤처 등 정책 수단 활용 등이다. 혁신추진위는 세부적으로 투자사와 기업 유치, 스마트 산단 조성, 연구기관 설립·유치 등을 제안했다.

부문별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세계 10위권 성능의 슈퍼컴퓨터 구축,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와 연계한 연구기관 유치 등도 권고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가 국토 서남부 경제,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인공지능이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권고사항이 시정에 반영돼 광주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건의안 제출

광주시의회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법제화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문회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역경제 선도 '명품 강소기업' 36곳 선정

광주시는 "지역 경제를 이끌 명품 강소기업 36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9월까지인 제 8기 기업은 유포닉스, 우성정공, 그린테 등 19곳이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인 제9기는 씨엔티, 오택캐리어, 현성오토텍 등 17곳이다. 명품 강소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 100여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 1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 산업체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지정 기간 R&D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지원을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